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4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5. 7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김정재 · 권명호
권영세 · 조명희 · 조수진
안병길 · 김태호 · 이명수
박성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. 현재,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, 기증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.

또한,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,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,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 불균형이 심함.

실제로 2019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32,990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50명(1.3%)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임.

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

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 또한, 국가에만 부과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자 함(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장기등기증자”를 “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 기증자”로 한다.

제32조제3항 중 “국가”를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(생 략)	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</u>	3. <u>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</u>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·② (생 략)	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국가</u> 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③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